

456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 - 품격있는 문명국가

경제안보와 한국의 과제

연사 |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일시 | 5월 9일 (목) 오전 7시 30분

장소 | Google Meet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 **구글 미트 설치법**

주최 | 한반도선진화재단, 정보경영연구원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 참가하기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구촌의 경제와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반도체, AI 기술 등의 전략물자와 기술이 경제 안보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으로 탈세계화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런 흐름 속에서 경제와 안보는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그는 탈세계화, 미중 대립 등으로 인한 영향이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고, 다자 무역 체제에 노출된 한국에는 더 치명적이라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이어 그는 불확실성이 강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협상 레버리지를 높일 것을 주문합니다. 즉 기업은 기술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며, 정부도 다른 주요국의 경쟁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정책에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효영 교수와 함께 경제 안보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 세미나는 (사) 정보경영연구원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연사소개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부연구위원

참가방법안내

이번 상반기 공동체자유주의세미나는 온라인 비대면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참여자께서는 Google Meet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에 참가하시면 발제자의 강연 후 진행되는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는 추후 유튜브 '한선TV'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5월 세미나 일정

일정	주 제	발제자
5.9	경제안보와 한국의 과제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5.16	초고령사회의 노인정책	김미령 대구대학교 명예교수
5.23	출생률 제고를 위한 양성평등정책	오진영 여의도연구원 정책 자문위원
5.30	한일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

경제안보와 한국의 과제

2024. 5. 9

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

이효영(국립외교원)

목차

- ❖ 경제안보의 개념과 배경
- ❖ 다자통상체제에서의 '경제안보'
- ❖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및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 동향
- ❖ 경제안보의 국제통상질서에 대한 함의
- ❖ 우리의 경제안보 정책 방향

'경제적 통치술'

❖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의 형태

- 국가가 추구하는 대외적 정책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수단 활용
 - ✓ 부정적 형태: 수출통제, 경제제재, 수입규제 등
 - ✓ 긍정적 형태: 관세인하, 비차별대우 등 시장개방 조치, 수출입 허가, 보조금 등
-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 1950년대 이후 전후 세계경제 회복의 가속화, 군사적 동맹 강화, 전략적 원자재 공급원 및 개도국 수출시장 확보 목적의 경제적 통치술의 일종
- 수입관세(import tariffs): 국내고용 창출, 경제적 자립도 제고 목적의 대표적인 부정적 형태의 경제적 통치술; 영향력 큰 국내 생산자들의 보호 통해 국내정치적 목적도 동시 추구
- 보조금 및 수출·입 허가: 상대국 기업의 전략적 재화 및 기술의 자국 유치 등 위한 긍정적 형태의 경제적 통치술로 활용 가능

	부정적 형태	긍정적 형태
통상 조치	- 금수조치 - 보이콧 조치 - 수입관세 인상 - 차별적 관세 부과 - 비차별 조치 철회 - 블랙리스트 - 수출·입 쿼터 적용 및 통제 - 수입허가 거부 - 덤핑(가격 투매) 등	- 특혜 관세 - 비차별대우(MFN) 제공 - 수입관세 인하 - 직접구매 - 수출·입 보조금 - 수출·입 허가 등
금융 조치	- 자산 동결 - 대외원조 정지 - 수송 - 차별적 세금 부과 - 국제기구 회원비 지불보류 등	- 대외원조 - 투자보증 - 민간자본·투자 보증 - 세금 우대 등

* 자료: D. Baldwin(1985), Economic Statecraft, pp. 40-41.

'경제안보'

❖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의 이익을 강조하는 경제적 통치술의 한 형태
- 국가의 '권력'과 '부강'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자원, 재원, 시장 등에 충분히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
 - ✓ 권력(power) 유지: 국가의 군사·외교적 역량의 확보 위해 경제적 번영 필수
 - ✓ 경제적 부강(wealth): 국가의 복지, 보건, 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적 안정
-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의 '경제안보'
 - ✓ 경제는 안보에 귀속됨
 - ✓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경제적 수단 사용
 - ✓ 국가안보를 위한 경제적 수단은 상대국의 권력을 약화 또는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 수단
 - ✓ 국가의 경제적 자원 확보 역량에 따라 국가의 권력 수준 결정됨
 - ✓ 전통적 국가안보의 영역 확대(경제, 식량, 환경, 사회적 요인 등)

'경제안보'의 진화

❖ 경제-안보 관계의 진화

- **1950년대(브레튼우즈 체제 수립) 이후의 경제-안보의 관계: '안보'보다 '경제' 중시**
 - ✓ 자유주의적 접근 및 논의 주도(자유주의적 시장가치 및 효용성 중시)
 - ✓ 상품·자본·사람의 이동과 교류에 대한 제한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국제경제질서 형성
 - ✓ 국가의 경제적 역량은 군사적 역량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건
 - ✓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위협적인 상대국 또는 적국이 될 수 있음
 - ✓ 경제발전 및 경제통합에 의해 국제관계에서의 전쟁과 갈등 등 위험요인 약화 가능
 - ✓ 국가의 경제성장 및 경제력은 단순한 경제적 후생효과 차원을 넘어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정책수단
- **1990년대 이후 경제-안보의 관계: 자유주의적 접근방식 유지 속에서 인식 변화**
 - ✓ 국가의 산업기반 및 인프라도 국가경제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인지
 - ✓ 국방산업기반의 구축을 통해 현대적 전쟁 역량의 확보 가능하다는 인식 부활
 - ✓ 선진국의 인식 변화: 자유주의 기반 국제경제질서 하에서 군사적 위협은 감소하였지만 산업기반에 대한 경제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는 증대
 - ✓ 기술발전의 속도 가속화 및 기술력 가진 국가들의 경제발전 가속화 등 환경에서 국가가 모든 국가적 자원의 자체적 생산 불가 및 대외 의존도 심화에 대한 우려 상존
 - ✓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도 자유무역을 주창하면서 동시에 국가안보 관련 긴급 상황에 대한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한 예외 허용 규범화 방식 채택

'경제안보'의 진화

❖ 경제-안보 관계의 진화

- **2000년대 이후 경제-안보의 관계: 경제-안보의 연계 강화 시작**
 - ✓ 세계화의 급속한 확산 및 글로벌 공급망 확대 통한 국가간 상호의존성 및 초연결성 증대
 - ✓ GVC 확산: 경제적 효율성과 동시에 국가별 비대칭성 및 공급망 연계의 불균등성 문제
 - ✓ 국가간 상호의존의 '무기화(weaponization)' 통해 경쟁국 압박 가능(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사례)
 - ✓ 거대 시장을 확보한 주요국이 자국 시장 또는 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압박 조치를 통해 경쟁국의 경제적 부상 저지 및 상대국의 국내정책 및 대외정책에 영향 행사 가능
 - ✓ 특정국들이 다자무역체제의 혜택 속에서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통해 경제적 부상 및 패권국의 경제적 지위 위협 가능
 - ✓ 기존의 '경제적 효율성' 보다 '국가안보 이익'의 중요성에 주목 ('안보를 위한 경제'로 회귀)
- **미-중 갈등 심화 이후 경제-안보의 관계: 경제안보 수단의 다양화**
 - ✓ 기존의 수입규제 및 수출통제(자원) 조치 위주
 - ✓ 경제안보 정책수단의 다양화: 수입규제 조치 확대, 수출통제 조치 확대(첨단기술 분야), 보조금 및 국내생산우대를 통한 산업정책, 공급망 재편, 외국인투자(FDI) 규제 강화
 - ✓ 산업정책과 공급망 재편을 통한 경제적 통치술: 미래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 국내 제조업 역량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 국가적 자원 및 동맹·우방국과의 국제협력 총동원
 - ✓ 산업정책은 다자무역체제의 보조금 규범과 충돌하고 있어 기존 다자무역규범의 구속력 약화 및 국가안보 예외 규정의 원용 정당화 움직임
 - ✓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와 동격화: 경제문제의 '안보화(securitization)' 통해 범부처 및 전 국가 차원의 결집 및 단합된 대응 유도

경제-안보 연계 강화의 배경

❖ 첨단기술: 이중용도의 특징과 관리 필요성

- 첨단기술은 미래 산업분야에서의 경쟁우위 확보에 필수 및 군사적 분야에서의 혁신 역량 좌우
- 기술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 및 전략적 접근 등 첨단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는 국제관계에서의 리더십 장악 및 유지 가능
- 기술 경쟁력을 상실한 패권국은 기술추격에 성공한 부상국을 저지할 수 없는 상황 초래 가능
- 지속적인 기술발전 여부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에 영향,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술역량 부재 시 경제·정치·군사 등 전 부문에서 기존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 초래 가능
- 첨단기술의 이중용도(dual use)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직접적 영향
 - ✓ 국제 수출통제체제: 이중용도 기술품목은 전략물자로 지정 및 국제수출통제체제(WA)를 통해 관리
 - ✓ 국가 차원의 수출관리체제: 5G 이동통신, AI 등 첨단기술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기존 수출통제 조치 강화 및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
- 첨단기술의 외부효과(externality)로 인하여 기술을 선점한 국가들에 대한 수입 의존 및 국가간 상호의존성 심화
 - ✓ 국제적 위기 등 긴급 상황 발생시 대외의존도 높은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공급 교란으로 인한 국가안보 문제 초래 가능
-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의 반도체 기술 관리
 - ✓ 반도체 생산기술에 대하여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5G, AI 등 첨단기술 기반이 되는 핵심 전략물자로 인식
 - ✓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및 자체 생산역량 강화 위해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위한 법 제정

경제-안보 연계 강화의 배경

❖ 글로벌 공급망: 상호의존성 문제 및 국내산업기반의 확보 필요성

- 코로나19 등 자연발생적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 노출
- 주요 제조업의 필수 투입재에 대한 공급 교란은 국가경제의 안정성 위협 및 국가안보 침해
- 효율성과 저비용을 강조해온 기존의 생산전략은 주요 물자 및 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생산, 공급 교란에 대한 탄력적 회복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
- 글로벌 공급망 확산을 통해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필수 경제 인프라인 국가의 산업기반은 그동안 과도한 대외수입과 해외생산에 의존
- 핵심 제조업 분야에서의 자체적인 생산역량 및 혁신 경쟁력 확보 여부는 국가안보 문제와 직결
- 국내산업기반의 탄력성은 국내 제조업 및 혁신 역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국내 혁신역량의 이탈 의미
- 국가의 재정 투입을 통한 국내 핵심 제조업의 육성과 혁신기반의 조성은 '경제안보'와 직결
- 주요 경쟁국들의 전략적인 산업정책은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식
 - ✓ 국가재정 투입 및 연구개발 지원
 - ✓ 국내수요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 전략적인 국제협력 및 공조를 통한 대응 필요성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 및 반도체 생산 핵심원료의 공급 불안 리스크는 주요 제조업의 공급망 및 품목에 대한 수입의존도 관리 및 대체 공급선 발굴 필요성 등 경제안보의 중요성 더욱 부각

다자통상체제에서의 '경제안보'

❖ WTO 체제에서의 '국가안보'

- 무역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는 다자통상체제 하에서도 매우 포괄적인 '안보예외(security exceptions)' 조항을 통해 국가안보 목적의 무역제한적 조치 허용
- 다자통상체제는 '국가안보'의 정책적 목적 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안전, 공공질서의 유지 및 공중도덕의 보호, 환경·자원의 보전, 국내법의 준수 등 정당한 정책적 목적을 위한 무역제한적 조치 허용
- 공중보건, 환경, 공공질서 등 일반예외 규정과 달리 국가안보 예외는 별도 규정 및 상이한 규범화 방식 통해 상이한 예외적용 범위

❖ GATT 제21조 '안보예외(security exception)' 규정

- '일반예외' 규정과 차별화: 규제조치의 제한적인 적용을 조건으로 하는 두문(chapeau) 규정 부재
- 무역제한적 규제조치에 대하여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essential security interest)'의 보호 위한 필요성 여부 관련 재량적 판단 권한 인정
- 허용적인 안보예외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
 - ✓ 핵무기와 관련된 조치
 - ✓ 기타 재래식 무기 등 군사시설에 공급되는 재화나 물질의 거래와 관련된 조치
 - ✓ 국가들이 전시 또는 기타 국제관계에 있어 비상상황에서 취하게 되는 조치
- 국가들에게 상당한 재량적 판단 권한을 부여하는 포괄적인 안보예외 조항의 존재는 무역자유화를 중시하는 국제통상체제 하에서도 '경제-안보 연계'의 필요성 인정

다자통상체제에서의 '경제안보'

❖ GATT 제21조 '안보예외' 규정의 적용

- **미국-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US-Steel and Aluminum Products, DS544~564) 분쟁**
 - ✓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의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가 자국 철강산업의 자체적인 생산역량을 상실 시켜 긴급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여 GATT 제21조 (b)(iii)항의 '기타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사태(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에 해당한다고 주장
 - ✓ WTO 분쟁해결 패널은 '기타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사태'는 국제관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전쟁에 버금가는 '중대성 또는 심각성(gravity or severity)'을 지녀야 한다고 해석, 미국의 주장을 기각
 - ✓ 패널은 '**글로벌 공급 과잉' 문제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할 만큼 충분히 연관성(relevance)이 있거나 중대성(weight)을 지니지 않는다고 판단함**
 - ✓ 미국은 패널의 판정을 **상소기구에 회부하여 미국 조치의 철회를 권고하는 판정결과의 이행 불가**
 - **러시아-통행금지 조치(Russia-Traffic in Transit, DS512) 분쟁**
 - ✓ 패널은 GATT 제21조 (b)항의 (i)호 내지 (iii)호에 규정된 상황들(circumstances)은 동 조항을 원용하는 회원국의 재량적 결정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
 - ✓ '핵심적인 안보이익(essential security interest)'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회원국에게 부여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며, 이는 패널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 판정
 - ✓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통행제한 조치는 '기타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간주되어 통행제한 조치는 안보예외 규정에 의해 정당화됨
- 안보예외 규정을 원용한 러시아의 승소에 따라 향후 회원국들에 의한 국가안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무역규제 조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이 자국에게 불리한 WTO 분쟁 판정 결과에 불복하며 패널의 판정을 상소기구에 회부하여 판정결과의 채택을 무산시키게 되면서 WTO 체제의 규범력은 크게 약화됨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1)

❖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

- 전통적 국내산업 보호 조치: 수입규제(반덤핑·상계관세 등)
- 트럼프 행정부 이후 기존 보호 조치의 확대 및 다양화
 - ✓ 국가안보 목적의 수입규제(232조), 중국 불공정 관행 대응 위한 수입규제(301조)
 - ✓ 반도체, 5G 관련 기술의 수출통제 및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
- 바이든 행정부 이후 보호 조치의 다양화 및 다자화
 - ✓ 수입규제 유지, 외국인투자규제 심화, 첨단기술 수출통제의 다자화
 - ✓ 공급망 재편: 중국 '디커플링' 위한 미국 제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및 우방국으로 공급원 다변화(friend-shoring)
 - ✓ 산업보조금 정책: 반도체, 친환경·바이오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경제인프라 재건 위한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및 미래산업 경쟁력 회복
 - ✓ Buy America: 최종제품 및 투입소재의 미국/북미 지역내 생산요건(LCR) 통해 국내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

❖ 공급망 안정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07, 2021년 2월 24일)

	대상 품목/산업	정책 옵션	정책 권고 (예시)
4개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제조 및 패키징 ✓ 고성능 배터리 ✓ 전략적 광물자원 ✓ 의약품 및 의약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탄력성 강화 조치 • 공급망 대책의 효과 제고를 위한 법·제도·절차 및 조직 차원의 개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쇼어링 및 국내생산 역량 개발 • 동맹국과 공조 및 기존 공급망 대체 • 국내 공급망 통한 과잉공급 및 국내비축 • 생산인력 역량 제고
6개 산업 영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 ✓ 공중보건 ✓ 정보통신기술(ICT) ✓ 에너지 ✓ 운송 ✓ 농산물 및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공급망 검토 실시 • 동맹국과 함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외교·경제·안보·통상정책 등 조치 • 국제규범 및 국제협정의 개정 • 생산인력 교육 개선 • 핵심 제품과 재료 대상 투자 인센티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 지원 확대 • 공급망 확대 위한 연구개발 • 공급망 의존 디지털제품에 대한 취약성 대응 •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등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

❖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8.9)

- ✓ 미국의 핵심 미래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총 2,800억 달러 투입 예정
- ✓ 반도체 제조역량 강화, 연구개발 지원 등 527억 달러 예산 책정
- ✓ 중국 등 '안보위협국'에 대한 신규투자 가드레일 조항

❖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8.16)

- ✓ 기후변화 대응, 보건 분야 복지 개선, 기업 과세 개편 통해 미국 재정적자 해소, 친환경경제 전환 및 인플레이션 감축 효과 도모 위해 총 7,730억 달러 투입 예정
- ✓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청정연료 사용 자동차 산업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에 4,330억 달러 책정
- ✓ 전기차 관련 북미 지역내 최종조립 요건, 배터리 핵심광물 및 소재의 국내산사용요건(LCR) 등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적용

❖ 바이오 기술 및 제조 혁신 관련 행정명령(9.12)

-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바이오경제(bioeconomy) 육성을 위해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 제조혁신 위한 R&D 지원, 바이오 데이터 생태계 육성, 국내 바이오제조 생산역량 개선 등

❖ Buy Clean Action(9.15)

- ✓ 친환경 조달계획(Federal Buy Clean Initiative) 일환으로 IRA 예산 중 45억 달러 투입 예정
- ✓ 철강, 시멘트, 아스팔트, 판유리 등 4개 건설자재 조달 위한 저탄소 기준 적용 및 공급자 보고 의무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 시사점

❖ 보건·환경 안보 분야로 국가안보·경제안보 영역 확대

- ✓ 보건위기(코로나19) 및 환경위기(기후변화) 대응 위한 공급망 탄력성 강화 필요성 명분 강조
- ✓ 국가안보 목적의 반도체 기술력 보호를 위한 수출통제 및 외국인투자 심사 조치의 활용 지속 전망
- ✓ 반도체 산업의 국가안보 중요성으로 인한 대중국 견제 조치의 강화 전망

❖ 국가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의 부활

- ✓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 정책(세금면제, 대출, 자금지원 등) 추진
- ✓ 정부조달 활용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구(미국산 제품 우대 강화)
- ✓ 수출 역량 지닌 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기능 강화 추구

❖ 동맹국을 활용한 공급망 안정화(friend-shoring) 및 수출·투자 규제의 강화

- ✓ 동맹국의 반도체 기술력을 활용한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 추구
- ✓ 반도체 특정 기술력 및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미국 수출통제 조치 동참 압박
- ✓ 중국의 효과적 견제를 위해 동맹국과의 반도체 기술이전 차단 위한 투자 규제 강화 추진

❖ 주요 선진국 공급망 참여를 위한 환경·노동 기준의 강화

- ✓ 반도체 공정 과정(화학재료 유출 등)의 환경기준 강화를 통한 불공정 경쟁 견제 추구
- ✓ 반도체 외 핵심광물 생산/채굴 공정의 환경 및 노동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표준 제정 노력 전망
- ✓ R&D 성과의 지재권 침해 및 강제적 기술이전 방지를 위한 수출통제 조치를 넘어 중국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대응 명분으로서 수출통제 조치의 적용 확대 가능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2)

❖ EU의 경제안보 정책

- 미-중 갈등 대응 차원의 '개방적·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대외정책 모색
 - ✓ 주요 국제현안에 대하여 독자적인 영향력 추구, 미국과 최대한 협력하되 대중국 정책 자율성
 - ✓ 미국의 대중국 인식 및 입장의 차이 및 대중국 경제관계 고려한 접근방식
- EU의 중국 정책(2019년 중국전략 문서)
 - ✓ EU와 경제적 목표 공유하면서 이해관계의 균형 필요한 '협력 및 협상 파트너(partner)'
 - ✓ 기술적 패권 추구하는 '경제적 경쟁국(economic competitor)'
 - ✓ 기존 거버넌스 대체 추구하는 '체제적 경쟁국(systemic rival)'
- EU 공급망 환경·인권 기준 실사(due diligence) 의무화 제도
 - ✓ EU 역내 투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기업활동의 책임성 및 환경·인권 등 '가치' 존중 요구
 - ✓ EU 산업정책 강화를 통한 EU 역내 자립도 및 경쟁력 제고 목적
 - ✓ 전 산업으로 실사 대상 확대 및 의무화 통해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목적

EU의 경제안보 정책

❖ '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 2023. 6.20 발표 (EU 집행위원회)

- ✓ 'Open Strategic Autonomy' 전략과 일맥상통하면서도 EU의 경제안보 더욱 초점
- ✓ 지정학적 갈등 및 기술발전의 가속화로 인한 **리스크 최소화 및 경제적 개방성과 역동성 유지**할 수 있는 역내 환경 구축 목적
- ✓ 특정국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축소하여 EU의 자율성 강화 및 우방국과의 협력 통해 공통 안보문제 대응 및 위기 탄력성 제고

❖ EU 경제안보 위협요인(4가지 유형)

- ✓ 에너지 안보 등 공급망 탄력성 관련 위험
- ✓ 핵심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위험 및 사이버 안보 위험
- ✓ 기술안보 및 기술유출 관련 위험
- ✓ 경제적 의존성의 무기화 또는 경제적 강압 위험

❖ EU 경제안보 전략 추진 위한 3가지 우선순위

- ✓ **촉진(promotion)**: EU 단일시장 강화, 경제적 지원, 기술투자 및 산업기반 육성을 통해 EU 경쟁력 촉진; 첨단반도체,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탄소중립산업, 핵심원자재 등 전략적 분야에서 기술연구 및 산업기반 육성
- ✓ **보호(protection)**: 경제적 의존성의 무기화 및 통상위협에 대한 대응조치, 역외보조금 규제,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 조치의 EU 차원의 통합 및 강화, 해외투자 규제의 검토 등
- ✓ **협력(partnership)**: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 규칙에 기반한 경제질서 및 다자 기구 강화 등 EU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다양한 파트너국과 협력 추진

EU의 경제안보 정책: 촉진

- ❖ **산업정책: EU 경제안보 전략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
 - ✓ 청정기술, 원자재, 반도체, 데이터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제고 목표
 - ✓ EU의 그린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 육성에 초점
- ❖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inerals Act, CRMA)'**
 - ✓ 역내에서의 핵심 원자재 추출, 가공, 재활용 통해 수입의존도 완화 목적
- ❖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NZIA)'**
 - ✓ EU의 탄소중립 기술 안보 및 경쟁력 확보 위해 역내 탄소중립 기술의 제조역량 확대 목적
- ❖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 ✓ EU 역내에서의 반도체 안정적 공급 확보 목적

EU의 경제안보 정책: 보호

- ❖ **특정국으로의 이중용도(dual-use) 기술 이전을 통한 군사적 용도로의 활용 견제**
 - ✓ 기존의 무역구제 조치(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의 적극적 활용
 - ✓ 수출통제 조치의 EU 차원의 통합 및 강화,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규제 등 새로운 정책수단 통해 EU 경제안보 보호 강화
- ❖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 ✓ EU 단일시장 내 공정한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eld)의 조성 목적
- ❖ **‘경제적 압박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 ✓ 상대국의 무역, 투자에 대한 규제 통해 EU 정책변화 유도 행위 차단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 통해 공동대응 모색
- ❖ **‘사이버탄력성법(Cyber Resilience Act)’**
 - ✓ EU 회원국들의 5G 통신네트워크 구축사업 진행시 위험도가 높은(high-risk) 공급자 배제
 - ✓ 통신 및 에너지 인프라의 사이버 안보 강화

EU의 경제안보 정책: 보호

- ❖ **'이중용도 수출통제 규정(EU Regulation on dual-use export controls)'**
 - ✓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 중 민감성이 높은 신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강화
 - ✓ EU 차원의 통합적이며 조율된 수출통제 제도로 강화
 - ✓ 각 회원국의 기술분야별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바탕으로 2023년 말까지 EU 차원의 수출통제 제안 계획
- ❖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규제**
 - ✓ 외국인투자 거래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 여부 검토
 - ✓ 제3국의 기관 또는 제3국의 통제를 받는 EU 기관들의 역내 기술 개발 및 혁신활동 참여 제한
- ❖ **해외투자(outbound investment) 도입 여부 검토**
 - ✓ 안보 리스크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전담그룹 구축
 - ✓ 2023년 말까지 EU 집행위원회가 제안 계획

EU의 경제안보 정책: 시사점

❖ 상호의존의 '무기화(weaponization)' 대비

- ✓ 특정국에 과도하게 집중된 의존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공급 교란 위기 및 상호의존의 '무기화'에 대비하여 공급망의 안정성 강화 및 수출통제 등을 통한 기술안보 추구
- ✓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 동조화 경향 심화

❖ '리스크 기반(risk-based)' 접근방식

- ✓ 위험요인에 비례하는 대응조치를 통해 비례성(proportionality)과 정밀성(precision) 추구
- ✓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수단보다 신중한 접근방식 채택

❖ 산업정책 vs. 기술안보 및 인프라 보호

- ✓ 산업 보조금 정책에 초점 맞춰져 있는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
- ✓ 기술유출의 차단 및 핵심인프라 보호,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적 강압 대응에 중점

❖ 경제안보에 대한 포괄적 접근

- ✓ 국가안보와 무역투자의 영역을 통합하고자 하는 미국의 접근방식
- ✓ 경제안보를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며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완화
- ✓ 외부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역내 시장을 보호하여 EU 시장의 개방성 역동성 유지 목표

EU의 경제안보 정책: 시사점

❖ EU 경제안보 전략의 핵심 정책기조: '디리스크킹(de-risking)'

- ✓ EU 차원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 마련 및 세계화의 확대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 ✓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지정학적 위기는 지금까지 EU가 신봉해왔던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이상에서 벗어나 경제안보의 중요성 인식 및 세계화의 혜택에 대한 재검토 계기로 작용
- ✓ 일련의 복합적 위기를 통해 경제 분야 뿐 아니라 보건, 식량, 에너지 등 분야에서도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가능성 인식 및 위기의 증폭 가능성 전망
- ✓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응 필요성 인식 및 경제적 강압조치에 대한 EU 차원의 공동대응 모색 위한 정책수단 추구
- ✓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 안보 위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추구

❖ EU의 대중국 전략: 명시적 견제 아닌 신중한 입장

- ✓ 미국은 중국을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경제안보 및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목
- ✓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에너지 의존성의 무기화에 의해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지목
- ✓ EU의 수출통제 조치는 다자적 접근방식 추구, 효과성 및 정당성 확보 위해 EU 회원국 각국에게 수출통제 조치의 이행 권한 부여
- ✓ EU 역내에서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심사(inbound investment) 규제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을 겨냥한 해외투자(outbound investment) 규제는 유보적 입장

'경제안보'의 국제통상질서에 대한 함의

❖ 각국의 '경제안보' 정책의 국제통상질서에 대한 영향

- 국가 간 치열한 자국 산업보호 및 육성 위한 '보조금 전쟁'으로 확대 우려
 - ✓ '경제안보' 논리를 활용하여 전략적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상호 경쟁적 보조금 지원정책 통한 상대적 경쟁우위 확보 경쟁
 - ✓ 공공조달 및 산업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산소재사용요건(LCR)의 적용 강화 통해 동맹국 포함 무역·투자 상대국에 대한 차별 도입 등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 추진
 - ✓ 자국의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린 궁핍화(beggar-thy-neighbor)' 및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 초래 가능성
- 미국 통상정책의 '패러다임 변화(paradigm shift)' 및 국제통상질서의 대대적 변화 예고
 - ✓ 상이한 경제구조(국가주도형, 집중투자형)를 가진 국가들과의 경쟁 분야에 대한 일방주의적 보조금 지원 통한 경쟁여건 개선 노력
 - ✓ 시장개방, 무역자유화 위한 FTA 체결 및 다자무역체제의 틀 내에서 통상문제 해결하는 기존 방식 폐기
 - ✓ 기존 다자무역체제의 한계(중국 견제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다자규범력 약화 유도
- 새로운 형태의 국제통상질서 및 환경 구축 노력 김화 전망
 - ✓ 상호주의적 시장개방을 약속하지 않는 규범력이 약화된 형태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 구축
 - ✓ 지역별 통상질서 개편 위한 경제 협의체 구축(아시아 IPEF, 유럽 TTC, 중남미 APEP 등)
 - ✓ 상이한 정치·경제 체제국의 배제를 위해 공급망 재편 및 새로운 무역의제(환경·노동 등) 포괄

'경제안보' 정책의 추진 방향

❖ 경제-안보의 대등한 연계 통한 균형적인 접근방식 추구

- 경제-안보의 연계가 '경제' 또는 '안보'에 과도하게 경도되지 않도록 대등한 관계 설정 필요
 - ✓ 대외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접근 필요
 - ✓ 다자무역체제 하에서 국가들의 안보정책과 통상정책이 균형적으로 추구될 수 있도록 안보예외 규정의 적용에 대한 원칙 재정비 필요
- 통상정책과 안보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되도록 다자적 규범의 수립 필요
 - ✓ 국가안보 이익에 대한 각국의 재량권 허용하면서 동시에 안보예외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대한 구체화 필요
 - ✓ 경제안보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가안보의 개념을 고려하여 안보예외 규정의 현대화 필요
- 전통적인 다자무역규범화 노력 보다는 소다자적 형태 및 지역 차원의 통상질서 구축을 통해 균형 있는 '경제안보' 정책을 고려한 규범화 및 국가간 협력을 추구하는 방식 수용 필요
 - ✓ 중국, 러시아 등이 함께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인 IPEF 활용 필요
 - ✓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가 아닌 아시아 지역 차원의 '경제안보'를 위한 신통상질서 구축
 - ✓ 디지털경제, 환경(기후변화), 노동, 경쟁정책 등 오늘날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수요를 반영하는 무역의제를 다루는 실질적인(relevant) 국제통상체제의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주체(기업)들에게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다자무역체제의 형성 가능

우리의 경제안보 정책 방향

❖ 국가간 상이한 '경제안보' 정책 목표 구분


- ✓ 상이한 내수시장 규모, 대외무역 의존도 등에 따른 상이한 경제구조를 감안하여 각국의 상이한 '경제안보' 정책 방향 이해 필요
- ✓ '중국 견제' 명분의 '경제안보' 강화 위한 각국의 국내적 입법조치 관련 동맹국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 직시 및 적극 대응 필요
- ✓ 첨단기술 관련 수출통제 조치는 근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조치, 대외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구조 감안시 부적합한 통상정책 방향 (수출통제의 다자화 요구 대비 필요)

❖ 경제안보 정책 동향에 대한 사전감지 및 대응 메커니즘 구축 및 강화

- ✓ 미국, EU 등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의 국내적 입법동향 예의주시 및 타 경쟁국에 비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 필요
- ✓ 우리 기업의 투자계획 및 경쟁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향후 'Chip 4' 참여 요구 대응 필요
- ✓ 미국, EU 등 선진국 시장진출 위한 인센티브 정책 등의 수혜대상이 되기 위해 새로운 환경·노동 기준 적용 대비 및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 필요

❖ 다자적 국제통상질서의 회복 노력

- ✓ IPEF 등 지역 차원의 구속력 약화된 '경제 협의체' 형성 대비 필요
- ✓ 새로운 국제규범 및 국제표준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 및 우리 이해관계 최대 반영(실효성 있는 협력 추진)
- ✓ 중견국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다자통상질서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적극 동참 및 새로운 규범 수립 노력을 우리 경제안보 강화의 차원에서 접근 필요



Q & A